



축산생산자단체, 한목소리로 외치다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폐!
사룻값 대책촉구!”

축산생산자단체,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8월 11일 서울역 인근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총궐기대회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특별기획 I. 축산생산자단체,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이하 비대위) 주최로 8월 1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축산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는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단체 등 7,000여 명이 모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 2,500톤, 돼지고기 7만 톤, 분유류 1만 톤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에 모인 축산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폐 ▲사료 가격 안정대책 수립 ▲수입 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공개 ▲국방부 군 급식 경쟁입찰 철폐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행진했다. 아울러, 비대위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오히려 수입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국내산 축산물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무관세 조치로 포기한 관세수입은 2,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관세수입으로 거두어들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할인 쿠폰으로 발행하고 농가 사료 가격



안정에 지원하는 등의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축산물 장려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전국한우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 의도와 달리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으로 수입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4%가량 상승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수입 장려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축산농가들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며 “축산업을 천대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입축산물 무관세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가 수입축산물 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26년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는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호 회장은 "사료 가격이 지난 2년간 30% 이상 폭등하자 정부는 사료 가격 지원과 관련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했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받기 어려운 농가도 있다"며 "이번 조치는 결국 축산물 수입 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정부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폐와 함께 사료 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또한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정책으로 오히려 축산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부더라도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식량 주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흥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 원가 절감 정책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

다"며 "축산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축산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축산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찢기, 얼음 깨기 퍼포먼스를 펼침과 동시에 농민단체장의 릴레이 규탄 발언과 서울역 거리 행진 등이 진행됐으며, 집회장 인근 시민들에게 집회 취지 안내문과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전달해 사회적 공감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써,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7.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관세제로 발표 이후, 한우기준 7.4% 하락)하고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소비자에게 실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입장과는 다르게, 관세제로 이후에도 가격은 전혀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수입산 가격이 4% 이상 상승해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수입산 가격은 전혀 잡지도 못한 채 국내산 축산물 소비만 위축하고 가격만 하락시키는 정책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7월 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주요 내용으로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 유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10~16% 수준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되는 관계로 유통비용을 약 50%라고 감안할 때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수입축산물은 정부가 예상했던 관세인하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축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한 정책 역효과 발생시킬 수 있다.

수입소고기(2.58~4.45% 상승) 및 수입돼지고기(0.41% 상승)할 때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수입무관세로 인해 하락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 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 불과하다.

정부는 할당관세 0%가 적용 시 소비자가격 5~8% 하락 예상했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축산물 할당관세 제로 발표일 전후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세 가속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30~40%이상 상승해 국내산 축산물 생산기반을 위해선 최소가격 유지 필요하다.



건의사항

◎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최소 수입 축산물 무관세 지원금 2,000억 원 이상, 국내산 축산물 지원책 마련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 소비자가 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2 사료값 대책 촉구

남미 수급 악화 및 미산 곡물작황 부진, 달러 환율증가 등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러시아 수출제한 정책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곡물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망 차질로 이어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료가격 평균 kg당 152원이 상승했다. 이는 해외곡물 가격은 세계곡물 수급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22년 한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하반기 수입원료가격 반영분으로 인해 사료값 추가 상승요인이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 과중이 예상된다.

이에, 사료값 생산비 안정 및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 인상분의 일부차액을 보조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사항

- ◎ 해외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 지원 촉구
- ◎ 농가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기존대출 연장, 여신한도(동산/가축담보) 확대
-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구
- ◎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 ◎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㉓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건의

20년도 기준 전체 군 급식 조달규모는 1조 6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농·축산물 조달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전체의 36.7% 점유하고 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평시 안정적 조달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50년간 ‘국방부-농·축·수협’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방부는 군 급식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장병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올해 1만1천원으로 인상했으며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 경쟁조달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흰 우유 급식의무를 폐지하고 2024년부터 자율로 하기로 했다.

이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다. 정부는 애초부터 부실급식 원인을 「식재료 조달」 문제로 단정하고 전임 정부에서는 부실한 부대의 식단관리에서 비롯된 급식사태를 농·축협 수의계약에 따른 원재료 조달 문제라는 프레임 속에서 출발했다.

경쟁입찰 조달의 문제점은 전·평시 안정적 물량 조달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격중심 저가 경쟁입찰은 유통업체 위주 공급으로 전환되고 식재료 부실화의 악순환 구조 고착 우려가 크다.



건의사항

㉓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 군납은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시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저가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 필요
- 국내산 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전시체제를 대비하는 기본방향 설정
-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지역농촌과 공공조달 체계 구축 필요
- 국내 농축산물 판매 급감으로 인한 자급율 하락 및 식량안보 역행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납품까지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급주체 필요